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2

<http://sri.kostat.go.kr>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



보이스피싱 현황, 유형, 추이와 대응관련 시사점

서준배 (경찰대학)

- 보이스피싱은 전화음성(voice)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메신저피싱은 문자나 SNS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 휴대폰에 악성앱 등을 설치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기범죄다.
- 2006년 보이스피싱이 최초 발생한 이후 2019년 한해 3만 7,667건이 발생하여 최대를 기록하였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연간 3만여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발생 건수는 27만 8,200건이다.
-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금액은 3조 8,681억 원으로 1건당 피해금액은 2019년 1,699만 원, 2020년 2,210만 원, 2021년 2,500만 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 메신저피싱(스미싱)은 2019년 2,963건, 2020년 1만 3,224건, 2021년 1만 7,841건이 발생하였다. 피해금액은 2020년 587억 원, 2021년 1,265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보이스피싱 유형은 크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사기형'과 검찰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으로 나뉘는데, 대략 3:1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 편취수법에 있어서 2020년부터는 현금을 직접 인출·전달하게 하는 '대면편취'가 계속 늘어나 2021년에는 송금·이체 등 '비대면편취' 방식보다 3배 이상 발생하였다.
- 남성은 '대출사기'에 더 취약하고, 여성은 '기관사칭형'이나 메신저피싱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고령층이 취약할 것이라는 사회통념과 달리, 거의 모든 연령층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검거인원 중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총책'의 비율은 약 2%에 불과하고, 검거되는 대다수는 20대의 '현금인출·전달책'으로서 42.3%를 차지한다. 이들은 쉬운 일로 고액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방조범으로 모집·이용당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 5월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준다는 수법으로 국내에 최초로 발생한 이후에, 이제 우리 주변에서 국민 대부분이 경험하는 가장 흔한 범죄가 되었다. 그래서 유튜브에 관련된 동영상 조회 수가 몇 백만 회에 달하는 경우도 있으며 누구나 알고 있어 쉽게 당하지 않을 것 같은 범죄이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피해액이 3조 8,681억 원에 달하고, 누적 발생 건수가 27만 8,200건이나 되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이는 2021년 기준으로 매일 80여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1건당 피해금액도 2,000만 원을 훌쩍 넘는 것이다. 또한 보



이스피싱은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우울증, 대인기피, 불면증 등 심각한 2차 피해까지도 야기한다.

이 글에서는 범죄·안전 분야에서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그 개념, 피해 현황과 발생 추이, 범행수법의 변화, 주요 피해자의 특징을 살펴보고, 중국, 일본 등 해외의 보이스피싱 현황과도 비교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보이스피싱의 개념 정의

보이스피싱은 주로 형법상 사기죄로 분류되는데,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피해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스스로 넘겨주게 만든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피싱(phishing)’은 ‘사적인 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서 피해자를 속여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다. 이중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메신저피싱과 스미싱(smishing)은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나 SNS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다.

수법 면에서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대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지인인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속여 계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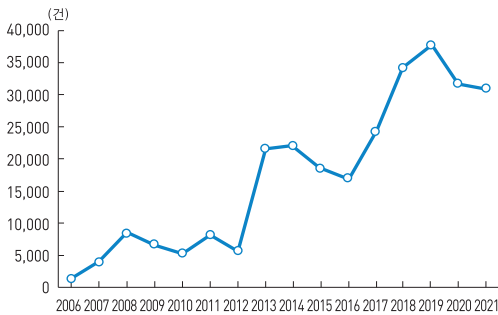
송금 또는 대면으로 전달하게 한다. 메신저피싱(스미싱)은 피해자에게 그럴듯한 SNS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링크를 눌러 원격조종을 하는 악성앱을 설치하게 만든다. 이후 알아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폰뱅킹에서 돈을 인출·송금해간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처음에는 음성전화로 접근하더라도 결국은 문자나 SNS를 보내 피해자에게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미끼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대출받는데 필요한 링크 등이라고 속여 악성앱을 깔게 만들고 피해자도 모르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다. 보이스피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국민 상당수가 금융서비스를 폰뱅킹을 이용해 해결하는 현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현황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06년 한해에 1,488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8,244건이 발생하였다가 2012년 5,709건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3년 2만 1,634건이 발생해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하였고, 이후 2017년까지 2만 건 안팎의 등락을 거듭하였다. 하지만 2018년 3만 4,132건이 발생해 최초로 3만 건을 돌파한 후

2019년 3만 7,667건으로 한 해 발생 건수로는 최대를 기록하였다. 그 후 다시 감소세로 반전되어 2020년에는 3만 1,681건, 2021년에는 3만 982건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발생 건수는 총 27만 8,200건이다(그림 X-16).

[그림 X-16]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2006-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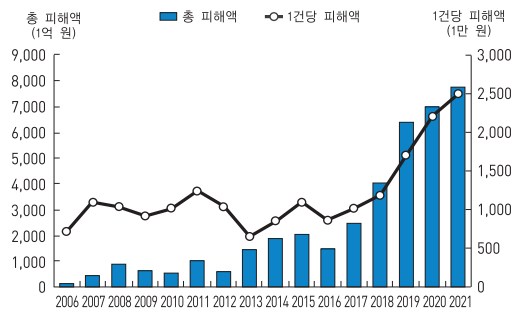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계자료」, 내부자료, 2022.6.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에는 106억 원, 2009년에는 621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2011년 1,0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최초로 1,000억 원을 돌파하였다. 그리고 2015년 2,040억 원, 2018년 4,040억 원, 2021년 7,744억 원이 발생해 피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사건 발생 건수는 다소 감소하거나 3만여 건에서 정체되어 있지만, 피해액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다. 즉, 1건당 피해금액은 2006년 712만 원, 2011년 1,236만 원, 2015년 1,100만 원으로 1,000만 원 내외를 유지하다가 2019년 1,699만

원, 2020년 2,210만 원, 2021년에는 2,500만 원으로 최고를 기록하였다. 이는 발생 건수의 경우 관계기관의 노력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범인들이 범행수법을 진화시키고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하게 되면서 피해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피해금액은 3조 8,681억 원이다(그림 X-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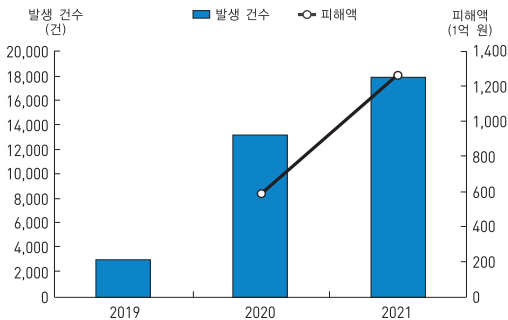
[그림 X-17] 보이스피싱 피해액, 2006-2021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계자료」, 내부자료, 2022.6.

메신저피싱은 2020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963건이 발생하였는데, 2020년에는 1만 3,224건으로 4.5배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1만 7,841건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당들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음성보다는 메신저피싱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도별 피해금액은 2020년 587억 원에서 2021년 1,26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2021년 기준 메신저피싱 1건당 피해금액은 709만 원이다(그림 X-18).

[그림 X-18]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 및 피해액, 201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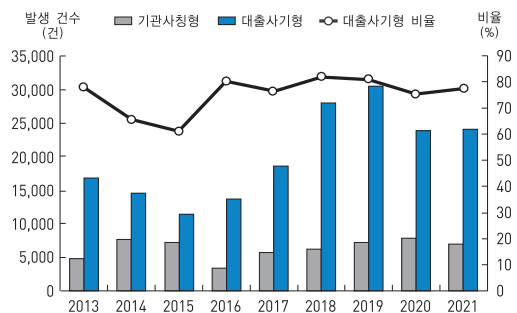
주: 1) 메신저이용사기와 스미싱을 합쳐 산출하였음.
 2) 2019년 피해액의 경우 메신저이용사기 피해액이 집계되지 않아 제외시켰음(스미싱 피해액의 경우 4억여 원임).
 출처: 정우택 의원실, 「'17~'21 사이버금융범죄 현황(경찰청 제출 자료)」, 2022.9.14.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형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고 의심계좌가 발견되었다며 수사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전달하라는 ‘기관사칭형’과 저리에 대출을 해주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대출사기형’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아들·딸 등 지인을 사칭하는 방법이 계속 유행하고 있으며, 그 당시의 사회적 이슈를 이용하는 새로운 수법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대환대출’ 등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비용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는 ‘선비용 수법(advance payment)’이 활용되고 있다. ‘기관사칭형’과 ‘대출사기형’은 보통 1:3의 비율로, ‘대출사기형’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들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는 수법이 검찰 등을 사칭하는 수법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그림 X-19).

[그림 X-19] 보이스피싱 유형별 발생 건수, 201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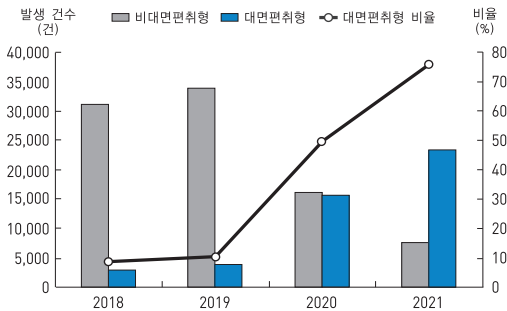


주: 1) 대출사기형 비율은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중 대출사기형발생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계자료」, 내부자료, 2022.6.

원래 보이스피싱은 계좌를 통한 송금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반대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방식을 ‘대면편취형’이라고 하는데, 2018년과 2019년까지만 해도 ‘대면편취형’ 방식이 전체의 10%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금융회사에서 송금된 금액에 대해 자동화기기(ATM)에서 30분간 돈을 찾을 수 없게 하는 ‘지연인출 제도’의 1회 출금한도를 2015년부터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사기이용계좌 속칭 ‘대포통장’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였다. 그러자 편취수법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사람을 보내어 직접 전달받는 방식으로 크게 바뀌었다. 즉, 소수에 불과하던 ‘대면

편취' 방식이 2020년 1만 5,686건으로 '비대면편취' 방식과 거의 같아지더니, 2021년에는 2만 3,425건으로 '비대면편취' 방식 7,557건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였다(그림 X-20).

[그림 X-20] 보이스피싱 편취수법별 발생 건수, 201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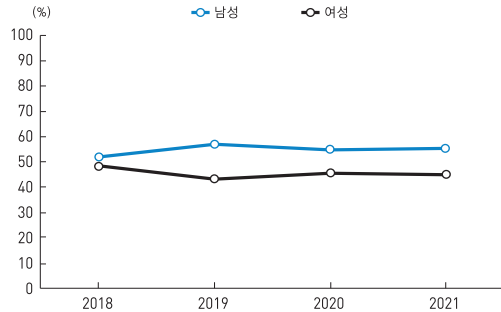
주: 1) '비대면편취형'에는 계좌이체, 가상계좌, 상품권 등 요구, 피싱혼합형 등이 포함됨.
 2) '대면편취형'에는 대면편취, 절도, 특정장소 지령, 배송형 등이 포함됨.
 3) 대면편취형 비율은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중 대면편취형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계자료」, 내부자료, 2022.6.

보이스피싱 피해자 프로필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8년 남성 피해자 비율은 51.8%, 2019년에는 56.9%,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54.6%와 55.0%로 나타났다(그림 X-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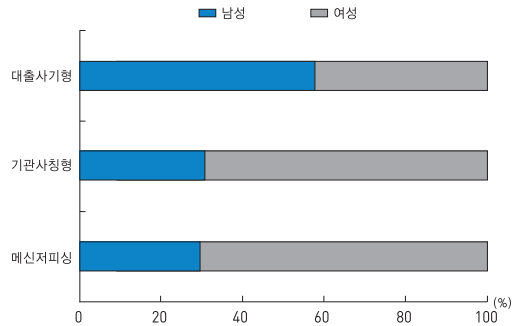
보이스피싱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대출사기형' 피해를 당하기 쉽고, 여성은 '기관사칭형'이나 '메신저피싱'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X-22). 이는 남성들은 대출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성들은 검찰 등 수사기관

[그림 X-21] 보이스피싱 피해자 성별 구성비율, 2018-2021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계자료」, 내부자료, 2022.6.

[그림 X-22]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자 성별 구성비율, 2017-2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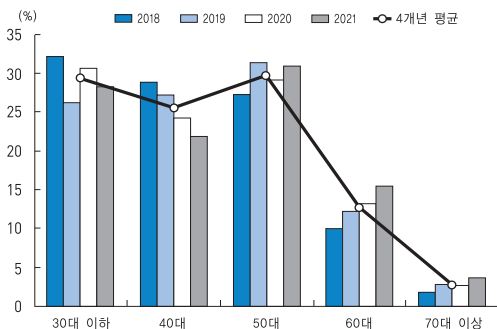
주: 1) 해당 기간 피해자 총 13만 5,000명을 분석한 결과임.
 출처: 금융감독원,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자 속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금융소비자 맞춤형 예방업무를 추진합니다」, 보도자료, 2020.8.11.

이나 아들·딸 등 지인사칭 문자메시지에 더 순응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이스피싱은 보통 인지능력과 컴퓨터 조작 능력이 저하되는 70대 이상 노년층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분석에 의하면, 60대 이상의 피해금액 비중이 2021년 614억 원으로 전체의 37.0%에 이르고, 2019년 이후 60대 이상의 비중이 지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금융감독

원, 2022.4.20). 하지만 경찰청의 2021년 통계에 의하면, 70대 이상 3.6%, 60대 15.4%, 50대 30.9%, 40대 21.8%, 30대 이하 28.3%로 나타났다(그림 X-23).¹⁾ 이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30대 이하 청년층, 40대 및 50대 중장년층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거의 모든 연령층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X-23]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별 구성비율, 201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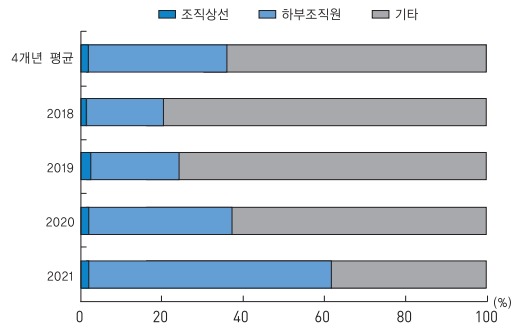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계자료」, 내부자료, 2022.6.

보이스피싱 피해자 현황

보이스피싱은 주로 중국, 필리핀, 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총책’, ‘관리책’, ‘텔레마케터’와 국내에 거주하는 ‘대면편취책’, ‘현금인출책’,

1)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에 의거 ‘송금·이체’ 방식만 통계에 포함하고, 경찰청은 현금 인출 후 전달하는 ‘대면편취’ 방식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X-24]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범행역할별 구성비율, 2018-2021



주: 1) ‘조직상선’은 총책, 관리책, 텔레마케터 등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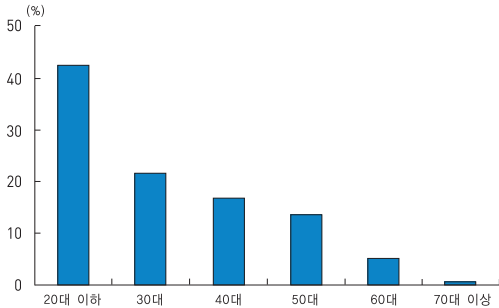
2) ‘하부조직원’은 대면편취책, 인출책, 절취책 등을 포함함.

3) ‘기타’는 계좌명의인, 통신업자, 환전책 등을 포함함.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계자료」, 내부자료, 2022.6.

‘전달책’, 그리고 범행에 사용하는 통신기기와 사기이용계좌를 준비하는 ‘장집’, 그리고 최종적으로 범죄수익을 자금세탁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 체계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범죄조직은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지인사칭형’ 등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조직원들 간에도 점조직으로 운영되어 서로를 잘 모르게 하여 사후 검거에 대비한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8~2021년 평균 검거인원 3만 8,015명 중 ‘총책’, ‘관리책’, ‘텔레마케터’ 등 ‘조직상선’의 검거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총책’들이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공조수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검거인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계좌명의인’, ‘통신업자’ 등 ‘방조범’으로 총 검거인원의 64.0%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면편취책’, ‘인출

[그림 X-25]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연령별 구성비율, 2021.4-2022.4



주: 1)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검거인원을 바탕으로 산출하였음.
2)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연령별 통계는 2021년 4월부터 집계되었음.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계자료」, 내부자료, 2022.6.

책, '절취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부조직원'들은 총 검거인원의 3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X-24). 보이스피싱 수사의 중심이 하부 변두리에서 점점 주범 검거에 집중되고는 있지만, 초국경범죄인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해외에 체류 중인 조직의 최고 상선을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된 피해자들의 연령구성을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1만 2,262명으로 42.3%, 30대가 6,211명으로 21.4%, 40대가 4,894명으로 16.9%, 50대가 3,966명으로 13.7%, 60대 이상이 1,659명으로 5.7%로 나타났다(그림 X-25). 대부분의 검거된 피해자들이 20대 이하로 나타난 것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광고에 현혹당한 20대 젊은 청년들이 법무사 사무실 채권 회수나 부동산계약금 등의

현금 전달 업무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의 '현금인출책'과 '전달책'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20대의 청년층이 사기 방조범으로 검거되어 전과가 생기고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배상명령 소송을 당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액의 현금전달 아르바이트가 사실은 보이스피싱 하부조직원으로 사기 방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관련 중국과 일본 현황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보이스피싱과 같이 전화를 이용해 현금 이체를 시키는 범죄를 '전화사편(电话诈骗)'이라고 한다. 연도별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는 2016년 51만 건에서 2017년 54만 건, 2018년 74만 건이 발생하였다. 피해금액도 2016년 2조 8,796억 원, 2017년 2조 417억 원으로 매우 크다(표 X-4).

〈표 X-4〉 중국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 및 피해액, 2016-2019

연도	발생 건수(1만 건)	피해액(1억 원)
2016	51.15	28,796
2017	53.70	20,417
2018	73.56	' 17년 대비 대폭 증가 추정
2019	71.27	' 18년 대비 소폭 감소 추정

주: 1) 2018년, 2019년의 피해금액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없어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작성됨.
출처: 황석진, 2021.

이처럼 심각한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해 2021년 4월 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통신 및 네트워크 사기범죄 단속에 중요한 지시를 내리고, 국민 중심의 전면적 예방·통제 조치를 통해 통신 및 네트워크 사기범죄를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국가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을 강조하였다(신화통신, 2021.4.9.)

〈표 X-5〉 일본 보이스피싱 인지 건수 및 피해액, 2012-2018

연도	인지 건수(건)	피해액(1억 엔)
2012	6,348	160.4
2013	9,204	258.7
2014	11,256	379.8
2015	12,741	393.7
2016	13,605	375.0
2017	17,926	378.1
2018	16,315	349.0

출처: 금융감독원 동경사무소, 「2018년 일본의 보이스피싱 동향 및 대응현황」, 2019.

일본에서는 보이스피싱을 ‘계좌이체(후리코메)’ 사기, ‘나야!나(오레오레)’ 사기라고 부른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일본의 보이스피싱 인지 건수는 1만 6,315건으로 전년 대비 8.9% 감소하여 7년 만에 감소세를 실현하였고, 피해금액도 전년보다 7.7% 감소한 349억 엔(한화 약 3,320억 원)이었다(표 X-5). 하지만 일본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일본에서도 직접적인 ‘현금전달’ 형태의 피해금액이 가장 크고, 전통적인 수단인 ‘이체’ 형태는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경

찰은 이러한 사기의 배후에 있는 폭력단(야쿠자) 등의 범죄단체에 대하여 다각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범행 참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스터 등을 활용한 홍보와 관계기관 등과 비행방지 교실 등을 개최하여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금융감독원 동경사무소, 2019).

보이스피싱 대응관련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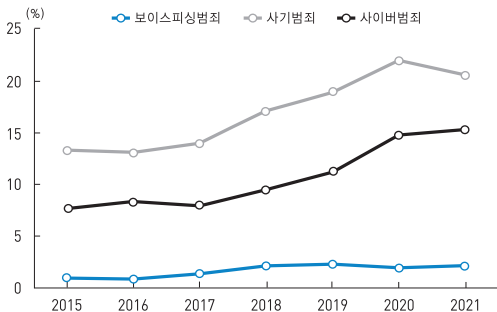
2010년대 전후로 시작된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현대 범죄의 양상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발달한 전기·통신·금융기술로 인해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스마트폰이나 비대면 방식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도 쉽게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과거 강도나 절도 같은 접촉을 통한 전통적인 ‘거리의 범죄들(street crimes)’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과 통신 기술(ICT)을 이용한 ‘사기(fraud)’와 ‘인터넷·사이버 범죄(cyber crimes)’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체 범죄 대비 사기범죄와 사이버범죄의 비율 증가에서 잘 나타난다. 2015년 경찰청에 보고된 연간 총 범죄 건수는 186만 1,657건으로 이 중 13.3%인 24만 7,293건이 사기범죄였고, 7.8%인 14만 4,679건이 사이버범죄였다. 하지만 6년 후인 2021년에는 전체 범죄 건수가 142만 9,826건으로 23.2%나 감소하였지만 사기범죄는 총 29만 4,075건으로 전체 범죄의



20.6%를 차지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역시 21만 7,807건으로 전체 범죄의 15.2%를 차지해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그림 X-26).

[그림 X-26] 전체 범죄 대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및 사이버범죄 비율, 2015-2021



주: 1) 발생 건수 기준임.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계자료」, 내부자료, 2022.6.; 「연도별 사이버범죄 통계현황」, 2021.10.27.; 「범죄통계」, 각 연도.

거의 모든 국민들이 가짜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한두 번 받아봤을 정도로 보이스피싱은 우리 삶에 일상화되었으며, 1인당 피해금액도 2021년 2,5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보이스피싱은 한 번 당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삶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경

제적 살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어리석음이나 부주의 때문이라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귀책이 수반된다는 특징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 개선 운동을 통해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노인층뿐만 아니라 악성앱 등 신기술과 결합된 첨단 수법으로 인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피해도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원격조종과 가로채기 기능 등 기망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성앱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연구개발(R&D)을 강화하여 통신·금융회사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국경화된 보이스피싱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기 위해서는 중국, 필리핀, 태국,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범인검거를 위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처럼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환경과 도구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치유와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만들어야 날로 심각해지는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동경사무소, 2019, 「2018년 일본의 보이스피싱 동향 및 대응현황」, 금융감독원.
 신화통신, 2021.4.9,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21-04/09/c_1127313085.htm.
 황석진, 2021,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고찰: 보이스피싱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1(1), 91-123.

